

농민의 자리에서 본다.

축산농가가 감내할 수 있는 사료값 인상률은 ?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지난 몇 개월동안 농축산 전문지를 보면 쌀 자급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 축산업계를 비롯한 다른 농축산업의 문제들이 쌀 자급 문제에 가리워져 버리는 느낌이다. 비단 전문지 뿐만 아니라 TV, 일간지 등 대중매체들도 식용 쌀 도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15대 국회 농림해양수산분과 위원회에서도 쌀 자급 문제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당초 약속대로 MMA 물량으로 가공용 쌀을 도입하는 것 외에 쌀 도입이 있어서는 안되고, 쌀 자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농업·농민·농촌 먹거리 를 걱정하는 몇몇 의원들 외에는 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쌀 재고가 바닥이 났으면 수입하면 되지 웬 호들갑이냐 쯤으로 생각하고, 농민단체의 주장을 아직도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국제조류와 경제논리를 모르는 농민이나 할 수 있는 것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층에 의외로 많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WTO출범 후 수지 안맞는 농사는 이제 점차 줄이고, 식량은 수입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왔으나, 쌀 수출국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식량 무기화는 최근 곡물의 공급 부족, 재고 감소 등과 국제 정세의 흐름속에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배합사료 가격이 다시 6~8%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금년에 사료값이 약 20% 인상되게 된다. 축산업, 그 중에도 배합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소가축(돼지, 닭)의 경우에는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IMF 조사단은 우리나라의 금년 국제 수지 적자가 140~150억불에 이를 것이고, 물가도 당초 계획 4.5%보다 큰 폭으로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경제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었다. 이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바뀌었는데, 최근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서 달러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인상이 사료값을 비롯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양축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이 안되어 외화가 없으면 쌀은 외상으로라도 수입해 와야 하는데, 이때가 되면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것과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식량이 무기화되면 돈이 있어도 곡물 수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요구를 들어주면서 허리를 긁혀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주도 품목들이 수출이 안된다는 데도 다행히 돼지고기 수출이 상반기에 1억불을 돌파해서 축산업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이 국내 양돈산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축산업계의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농, 한우 등 대가축의 경쟁력 상실과 양돈, 양계 등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가축의 사료값 인상 및 최근의 무차별 분뇨처리 단속 등은 축산업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한국 경제가 우량아로 성장해서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고 OECD 가입을 앞두고 선진국 문턱에서 돌연사(突然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 축산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고 세계수준에 도달해서 돼지고기 1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돌연사 하지 않도록 종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과연 폭등하는 사료값을 견디어 낼 것인가?

무차별적인 분뇨처리 단속은 축산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투자를 통해 생산에 부담을 안고 버티어 낼 것인가? 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잘 하고 있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피해 없이 정착될 것인가? 최근 매스컴의 고름우유, 병든소, 0-157 대장균 등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론의 횡포에서 축산업은 어떻게 버티어 낼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발전되어도 곡물의 무기화로 식량의 안보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축산업의 위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사료곡물의 해외 개발수입은 가능성 있는가? 그렇다면 축산물의 개발수입에 국내 축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외국의 유통업계 진출과 축산가공식품의 가격파괴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생각하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나와야 현재 640만두의 돼지 사육두수가 과연 2천년에 900만두까지 사육이 가능하며, 사육할 토지는 있으며, 현실적으로 돈사 건축이 가능한지? 이것이 불가능하면 새로운 수요는 수입에 의존할 것인지 등 그간 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워 서로 논의를 기피했던 문제들을 털어놓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힘들고 더러운 것을 비단으로 덮어 놓으면 우선은 보기 좋으나 냄새는 막을 수 없고, 결국은 비단 보자기까지 버리게 된다.

사료값 인상에 앞서 축산업계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축산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축산업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